

시론

인구 절벽을 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



김영집  
광주대 교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다. 2020년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팽창의 시대를 끝내고 축소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로 인해 호남권이 겪는 소멸의 공포는 실존적 위협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히 두 지자체의 행정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해답의 핵심 중 하나는 '글로벌 개방형 전략'이다. 성경동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은 포용적 혁신 국가의 비전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경의 벽까지 허무는 과감한 인구 및 인재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세계적 수준의 산업 플랫폼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비전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연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마련한 인구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현재의 저출생 대책만으로는 향후 50년 내에 인구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통합특별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300만 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출산 장려를 넘어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인구 유입, 즉 글로벌 인구 정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광주의 AI 인프라와 전남의 에너지·반도체 특화 단지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할 '최고급 인재(High-end)'가 절실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구의 15~20%를 외국인인과 재외동포로 채워겠다는 대담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를 전남광주로 불러들이는 사업이 필요한데, 필자는 '5대 글로벌 메가 엑스포'를 제안한다.

첫째, '국제 AI·자율주행 모빌리티 엑스포'. 광주의 AI와 영광의 이모빌리티, 고흥의 드론·UAM 역량을 결합하고, 진북의 피지컬 AI 자동차, 제주의 이모빌리티 엑스포까지 연계해 세계 최초의 실증형 쇼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한전 BIXPO를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으로 확장한 '세계 AI·그린에너지 엑스포'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를 RE100의 메카로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생산 중심의 농업을 푸드테크와 글로벌 유통 비즈니스로 전면 개편하는 '국제 미래식량·스마트푸드테크 박람회'다. 이를 통해 K-Food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남해안을 탄소중립 선도지구로 세계에 선보여야 한다.

다섯째, 광주비엔날레와 전남 수목비엔날

레, 미디어아트를 K-팝의 흐름과 통합한 'K-컬처 융합 박람회'다.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파편화된 행사들을 글로벌 규모로 대형화해 세계 5대 박람회를 열고 이를 미래 산업으로 연결하면, 글로벌 인재와 자본을 유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5대 메가 엑스포를 통해 연간 3조 원의 생산 유발과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가 엑스포가 단순한 행사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한상 네트워크를 통합특별시의 해외 영입망으로 활용하고, 유입된 인재들에게 'K-컬처 교육 벨트'와 '글로벌 혁신도시'를 제공해야 한다. 한류에 매료된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서 수학하고, 첨단 산업 현장에서 꿈을 펼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외국인 근로자 3만 5천~4만 명, 대학생 4천여 명, 결혼이민자 1만 5천여 명 등이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존 정책은 단순한 다문화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한 차원 높은 '글로벌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인구·산업·교육·문화 정책으로 나아가 갈 때 호남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쉬움은 이러한 글로벌 관점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UN AI 허브를 광주·전남에 유치하자는 혁신적인 발표를 한 후보도 있었지만 이를 포함해 우리에게 더 큰 차원의 글로벌 개방 혁신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社說

5·18정신 전문 수록 헌법 개정 이제는 국회의 시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은 전문에 4·19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삼았다.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시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우선해 포함시켰다. 이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개헌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6·3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이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2/3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불참한다면 시기를 들어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107

명 중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해서 데드라인인 5월10일 내 마무리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대로면 보수당 때문에 다시 무산되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대 대표는 5·18 사적지인 광주 동구 남동성당을 찾아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오월단체 등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교롭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 1년이 지났다. 광주 시민사회는 금남로 일대에서 공명정대한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국민주권선언 촛불대행진 행사를 열었다.

친위 쿠데타 저지와 탄핵까지의 과정에서 헌정 질서 파괴세력에 맞선 저항 의지가 확인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무기징역 선고는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기는 커녕 퇴행이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치권이 의지를 모아야 할 때다.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개헌 행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시민 눈높이 어긋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해야

광주 시민단체가 광역 행정통합 시대에 대비해 시내버스 운영 등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누누이 문제된 것처럼 적자를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로 준공영제 효과도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재정지원금은 2019년 733억원에서 2024년 1천369억원으로 88.2% 증가했다. 게다가 2024년 재정지원금이 운송수입액의 약 127%에 달했다. 표준운송원가도 급등했다. 면허차량 대형 기준 1일 대당 64만6천618원에서 78만8천484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의 양을 보여주는 총 운행 거리는 같은 기간 82만2천1천km에서 7천158만4천km로 10.8% 줄었다. 1억2천670만4천명인 승객 수는 82.6%인 9천570만7천명에 머물렀고, 운송수입액도 82.5%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노선 수는 102개로 6% 감소했고, 정류장은 모두 2천379개로 줄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로 서비스 향상을 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미 막대

한 세금으로 대규모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상상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고 있다. 이종으로 부담지우는 행태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토하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을 위한 제도라지만 눈높이에도 한참 어긋났다. 현재 투입은 갈수록 늘고 편 의성은 오히려 줄고 있다. 노선과 요금은 광주시가 결정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 버스가 담당하는 이원적 형태에서 재정 보전은 공공에 집중되고 경영 책임은 화려해 왔다는 지적이 심한 타당하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구조적 개선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통합에 맞춰 광역 교통체계의 전환도 본격화해야 한다. 특히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를 적극 확대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공영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책임 행정에 대한 요구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고

선거, 13일간의 소음인가 거대한 '거리 축제'인가



조영인

조인애드조인출판사 대표

예비경선의 뜨거웠던 열기가 본선 무대로 옮겨붙고 있다. 일찌감치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후보들의 자서전들도 이제는 서가(書架)를 떠나 유권자의 냉정한 검증대에 올랐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문장을 매만지고, 행사 기획자로서 현장의 파동을 읽은 필자의 눈에 요즘의 선거판은 거대한 '서사(Narrative)'의 전쟁터다. 후보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 유권자가 읽어야 할 것은 그 두툼한 기록 속에 담긴 약속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구현되는가 하는 점이다.

자서전 '기록'이 아니라 '국민과의 공적계약' 출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용 자서전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민과 맺은 소중한 '공적 계약'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자서전이 출판기념회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소모품'으로 쓰이고 잊혀진다.

유권자들은 이제 질문해야 한다. "자서전에 적은 철학과 공보물에 화려하게 편집된

약속들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기획자가 축제의 도면을 그릴 때 관객의 동선 하나까지 책임지듯, 후보자는 자신이 인쇄물에 새긴 문장 하나하나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제 자서전이라는 '텍스트'는 유세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그 진정성을 증명받아야 할 시간이다.

구태의연한 '확성기 유세'는 최악의 기획 이벤트 기획의 기본은 '관객(유권자)과의 공감'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 문화는 여전히 일방통행이다. 귀를 찢는 듯한 확성기 소리, 보행권을 침해하는 유세 차량,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로고송은 기획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쾌 지수'만 높이는 낙제점 짜리 행사다.

특히 유세 차량이 골목 어귀를 지날 때마다 낮잠에 든 어린아이들과 밤샘 근무 후 졸음을 청하는 야간 노동자의 평온은 무참히 깨진다. 법이 정한 소음 기준치(80dB)를 지킨다 한들, 정적 뿜어 주땀가에서 울려 퍼지는 로고송은 누군가의 소중한 휴식을 송두리째 뺏는 '폭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달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깨진 잠에 허망해지는 시민들에게 그 소리는 후보의 비전이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사람들은 이제 강요된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서전에 담긴 후보의 진심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것이 유권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다면 그 기획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이제 선거운동도 '브랜드 경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후보는 일방적인 정보 공급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매력을 발산하는 '실천적 기획자'가 돼야 한다.

품격을 높이는 '거리 축제형' 선거 제안 진정한 축제는 관객이 주인공이 될 때 완성된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고 싶다. 후보자들이 유세차 위에서 내외와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토크 콘서트', 공보물 속 핵심 정책을 시민과 현장에서 토론하는 '정책 팝업 스토어', 지역 청년들과 예술가들이 어우러지는 '문화 유세'가 그것이다.

우리 지역의 거리 곳곳이 후보의 비전과 철학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유권자가 즐겁게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면 어떨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역 전체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는 축제가 된다면, 선거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소음의 계절'이 아니라 기다리지는 '희망의 계절'이 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다. 행사 기획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관객의 '외면'이다. 후보자들은 자서전과 공보물에 새긴 내용을 지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유권자를 축제의 주최자로 대접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고품격 거리 축제 기록될 기획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한다.

독자투고

다중운집 상황, 질서와 대비가 안전을 만든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벚꽃이 만개하고 있다. 벚꽃 시즌과 각종 지역 축제가 이어지며 도심 곳곳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특히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는 특정 장소에 인원이 집중되며 혼잡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중운집 상황의 위험성을 체감하게 된다. 인파가 일정 수준을 넘어 밀집될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압박·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인원 솟임이나 이동 정체만으로도 순식간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며 넘어짐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출입로가 제한된 공간이나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작은 혼잡이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질서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밀거나 역행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현장 안내요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아울러 관계기관 역시 다중인파 관리를 위해 사전에 동선을 분리하고 위험 구간 점검,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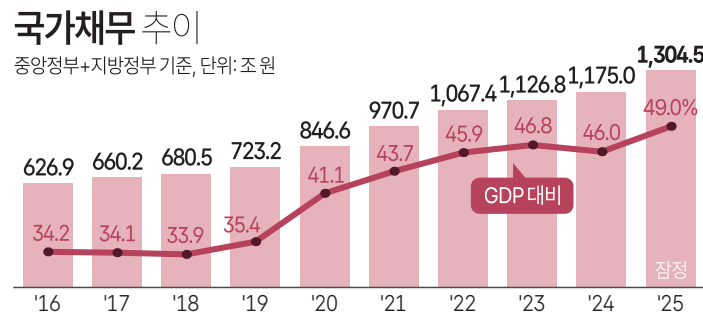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일수록 안전은 더욱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두의 작은 실천이 대형 사고는 막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또 하나의 사고를 통해 대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문환·순천경찰서 경비직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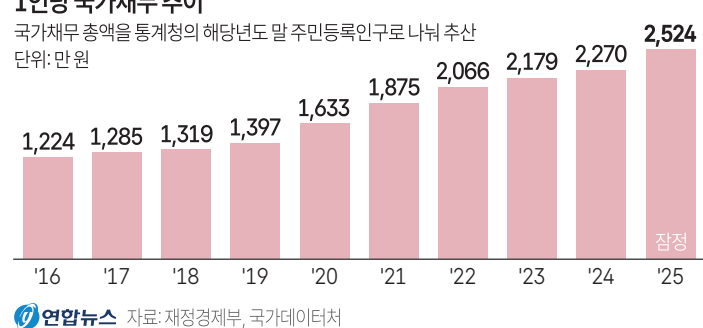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 가까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천175조원)보다 129조4천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301조9천억원)보다는 2조6천



억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당초 전망치(49.1%)보다는 낮았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천524만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으로, 전년(2천585조7천억원)보다 185조9천억원 증가했다.

연립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Phone Number, Department (지역특집부, 사진실, 논설실, TV본부, 서울지사), Phone Number, Department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 Phone Number, Department (FAX), Phone Number.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